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짜 학생 120만명

지난해 전체 학생의 31%...재정지원금 받고 사려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짜 학생들과 수백만 달러의 재정지원금 손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지금까지는 무료였던 입학 신청 절차에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지난 5월 20일 열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회의에서 처음 공식 논의됐다. 가짜 학생들이 연방 및 주 재정지원금을 노리고 대거 신청하면서, 시스템 전반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일부 위원들은 이 수수료가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교육 당국은 심각한 사기 규모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한 400만 명 이상의 학생 중 약 31%에 해당하는 120만 명이 사기로 판단됐다. 이는 오픈 액세스 원칙과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 증가로 인해 시스템이 허술해진 틈을 노린 결과다.

사기범들은 도용한 신분과 인공지능,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십~수백 명의 가짜 학생으로 등록한 뒤, 수업에 잠시 참여하다가 재정지원금만 받고 사라진다. 이들이 차지한 자리는 실제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박탈하고, 행정 부담도 가중시킨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짜 학생들에게 유출된 지원금은



▲ 한 학생이 LACC 교정을 지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연방 자금 840만 달러, 주 자금 270만 달러에 달했다. 2025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도 이미 4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과 76만 달러의 주 지원금이 사기로 간주돼 손실 처리됐다.

물론 모든 사기 신청이 실제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내의 탐지 기술이 점차 향상되면서 대부분의 가짜 신청은 등록 단계 전에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은 2026년 봄 학기 도입을 목표로, 사기 방지 기술이 통합된 새로운 신청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교육부 감사관실도 전국적으로 이

와 같은 사기 행위를 조사 중이며, 특히 수업료가 낮아 남는 지원금이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해체를 추진하면서 연방 감사관실의 인력도 20%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이로 인해 사기 조사 및 방지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024년 가을부터 재정지원금 신청자에게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대면 또는 실시간 화상 방식으로 신분증을 확인받아야 하며, 대학은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은 현재 ID.me 등 보안업체와 협력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각 캠퍼스 교직원들도 수업 내 참여 여부 등을 통해 실제 학생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의 니콜 알보-로페즈 부총장은 "한 지원자가 킬로그램 단위 체중이 기재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실제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기술 전략 담당 임원인 조리 해드셀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달러 수수료 부과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민 단속 요원 신분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 피의자를 연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민 단속에 나선 요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의되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요원 사칭 사건으로 증폭된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가주 상원의원 사샤 르네 페레스(민주당, 패서디나)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단속 활동 중 법 집행관이 적절하게 신분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재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 집행관을 사칭하는 개인들과 관련된 최근 사건들은 주 전역의 지역 사회에 혼란, 두려움,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 법안은 단속 활동 중 요원들이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남가주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민 단속,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의되었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크라운
(PFM)
\$65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800부터

Free
임플란트 상담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Blvd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